



우파는 문재인 인사 비난할 자격 없다.

그렇다고

문재인의 공약 위반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

청렴결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새 정부 인사

3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논란 4면
- 정규직화? 임금 등
노동조건도 정규직다워야 8면

문재인 정부는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을
끝내 외면하는가?

2면

문재인 저서
심층 분석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의 제국주의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을 낳았다 6면
- 토니 클리프:
한 혁명가의 생애 5면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김승주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지나도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가 한 기습 절절한 호소다.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는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온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원인은 무리한 선박 개조와 노후화에 따른 선체 균열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선급의 허술한 선박 안전 검사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평소 선원들은 스텔라데이지 호를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동배’”라고 불렀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다. 만약 사고 즉시 주변 해역을 수색했다면 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12시간이나 지나서야 한국 해경과 외교부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사고의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 급급해 선원들의 목숨은 뒷전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수부와 외교부도 사고 사실을 안 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보고하기까지 8시간을 허비했다.

그 사이 수색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브라질 공군이 사고 발생 28시간 뒤에 수색을 시작했지만 남대서양 망망대해 어딘가로 휩쓸려 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주세요” 경찰에 가로막힌 실종자 가족

구명벌은 사고 발생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4월 3일 해수부 장관 김영석은 “가족들이 양해할 때까지 끝까지 수색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금세 깨졌다. 해수부는 수색 해역을 통과하는 국가 소유 선박을 수색에 투입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국토 면적 정도 되는 바다를 선박 3~4척이 수색하는 꼴이다.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에 있는 가방 찾기와 다르지 않다. 위성도, 심해 수색 장비도 갖추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실종자 가족)

비상대책반 담당 부서인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에게 정례 브리핑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특이 사항이 있을 때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실종자 수색 상황실 공간도 정부

가 아니라 선사가 마련하도록 했다. 그나마도 선사는 5월 초 사무실 임대 계약이 끝났다며 퇴거를 통지했다.

결국 새 대통령이 당선한 5월 9일, 외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종자 가족 대표에게 수색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선사는 회사 경영을 이유로 수색에 투입했던 자사 선박들을 일방으로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특별 위로금”을 꺼내 들었다. 아직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가족들을 ‘유가족’ 취급하며, 수색을 중단하는 대신 보상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쳤던 “생명보다 돈이 먼저냐”는 절규가 또다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잘못이 있다면 처음부터 정부를 믿은 거겠죠.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황교안 정부로부터 잔인하게 버림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하면 스텔라데이지 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한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그러나 5월 26일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고 청와대를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 1백여 명에게 가로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저희는 (정부

의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사항 10가지를 제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단 한 개의 답변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 [그런 데도] 정부는 집중 수색은커녕 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초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재욱 엄마’ 홍영미 씨가 연대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 호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는 다르리라고 믿는 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구조 수색 작업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들 앞에 가로막히자 한 실종자 가족이 오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 주세요. 김정숙 여사라도 만나게 해 주세요. 여사도 아들을 키우시니 제 마음을 알 거잖아요. 내 아들은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아들 좀 찾아 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주 가까이 지났다. 재난 대처와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5·18 광주항쟁 기념사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눈앞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수색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수색에 투입될 돈과 행정적 노력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가?

중단된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남대서양을 지나는 국가 소유 선박들을 수색 작업에 동참시켜라. 브라질 정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도 동원하라.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하루하루 가족의 생존 소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이지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한국외국어대생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최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해군 모 대령을 직속부하인 여성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26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 대령은 여성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성 대위가 죽음으로까지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군 1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여군

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상관이 회식 중 여군들을 ‘도우미’처럼 불렀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군인권센터의 조사를 보면, 여성 군인 1백 명 중 19명은 성희롱을 당한 바 있고, 28명은 성희롱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2015년 백군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군인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백91건이었고, 그중 성범죄 사건은 1백24건(64.9퍼센트)이었다.

위선

그런데도 군 당국은 안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해서 빈축을 샀다. “제도적인 노력은 정말 많이 했다. 하지만 병영 문화까지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

다.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

2014년 성폭력 방지를 위해 도입한 “회식 지킴이 제도”는 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 회식 자리를 지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었고 범죄는 20퍼센트나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당국이 군대 내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신문> 보도를 보면, 2010~14년 동안 여성 군인에 대한 범죄 1백82건 중 83건이 강간·성추행 등의 성범죄였는데, 그중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 해결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다.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3퍼센트였

고,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90퍼센트나 됐다.

성범죄에 대한 군 당국의 너그러운 태도는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한 A대위가 군형법 92조6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군대의 본질을 생각하면 군대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폭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인 군대는 권위주의적 위계 체계 없이는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다른 부문들보다 차별이 폭력 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여군들도 차별받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수사·처벌하라

★ 한국과 영국 노동단체들의
성소수자 옹호 활동 소식

★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말하는
건설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대안

★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김문성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인사’라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탕평 인사” 성격이었던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등이 모두 위장전입 문제에 걸렸다.

물론 위장 전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민등록법은 국가 통제적 법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볼 일이다. 하지만, 김상조와 강경화의 경우는 모두 자녀의 명문 학교 배정을 위한 특권형 위장 전입으로 보인다.

이낙연은 위장 전입 외에 뇌물 입법 의혹, 처(妻)의 그림 강매 의혹 등이 제기됐다.(아래 기사)

강경화는 해명도 거짓이었다. 애초에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위장 전입 주소지는 딸의 입학목표로 한 이화여고(강경화의 모교)의 재단 소유 아파트였다.

김상조는 위장 전입뿐 아니라 탈세를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다우계약서) 신고 의혹, 처(妻)의 부정 취업 의혹 등 다른 특혜 의혹도 번졌다. 재벌 개혁을 천명한 탓에 기업주들이 채근하는 ‘검증’ 시도가 혹독할 것임을 이해하더라도, 의혹의 성격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해명도 부실하다.

국가정보원장 후보 서훈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반민주 악

법”으로 규정했던 테러방지법을 “[현행 법이므로 국정원이]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수집 활동만 폐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조차도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사실상 국가보안법 수사) 폐지에는 반대했다. 그는 민주적 권리를 위협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도 긍정적이다.

사실상 새누리당 정권 9년의 국정원 적폐에서 무엇이 청산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서훈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 맨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주류 언론들이 예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결 임명도 문제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가슴기 살균제 사측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노조 파괴 공작 박형철을 비롯해 반개혁적 인물들이 집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부패 행위들이나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보진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오늘>은 <한겨레>의 이낙연 의혹 추가 취재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취재 내용은 이낙연이 부패한 결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간부에게 의료 사업도 지원했다는 의혹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에 침묵할 뿐 아니라 심지어 덕담하기에 바쁜 일부 진보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수년 전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과 전투성에 해를 끼쳤던 “전략적 야권연대”가 “전략적 여권연대”로 변신해 등장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진보·좌파, 노동운동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동맹에 충성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받는 의혹은 모두 특권층형 부패 의혹이다 왼쪽부터 강경화, 김상조, 이낙연

공약 뒤집기

주요 인선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문재인이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자, 26일 비서실장 임종석이 사과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갈을 수 없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29일 문재인도 “양해를 당부했다.”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 [물론]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 …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니다.”

두 사람의 말 모두 개혁적 공약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래서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재인이 해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급히 마련한 새 인사 기준은 가령 위장 전입과 관련해 이렇다.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는 위장 전입자를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그 이전은 부동산 투기건만 배제한다. 문제가 된 딱 세 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세 명 모두 2005년 이전 건이고 자녀 교육 목적이었다. 애초 위장 전입이 주민들

록법 위반 문제라면, 2005년 7월이 기준이 될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일반인들은 위장 전입이 들롱나면 지금도 처벌받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이런 약점들은 이 당의 기반이 구 여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1선호 정당인 구 여권에 비해 제2선호 정당이므로, 정도는 좀 덜해도 지배계급의 부패한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 인물들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표를 얻으려고 낸 포퓰리즘적 공약들도 ‘국정 운영은 다르다’며 뒤집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자들은 입 닥쳐라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 등의 인준에 반대한다. 부패한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개도 웃을 일이다. 총체적 부패로 여당 지위를 뺏긴 지 겨우 두 달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내각 임명당시를 돌아보면,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전관 예우 특혜, 탈세 등 “결례 경연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자체 공금으로 향응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때는 총리 후보인 한승수와 환경부 장관 후보 박은경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복지부 김성이는 공금 유용 의혹, 통일부 남주홍은 부당공제 의혹이 터져나왔다.

해명도 뻔뻔했다. 박은경은 청문회에서 땅 투기 의혹에 “땅을 너무 사랑해서”라고 했다. 결국 고려대 총장 시절부터 오물 덩어리였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어윤대와 박은경, 남주홍 등이 임명 전에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도 못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낙마자가 너무 많아 인수위를 두 달 넘게 하고도 취임 한 달 후까지 내각 회의를 열 수가 없었다. 박근혜는 정권 4년 동안 총리를 3명밖에 기용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관 예우 특혜, 탈세, 직위 이용 추재 등 이유로 전형적인 특권층형 부패였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은 CIA 요원(첩자) 의혹을 받고 낙마했다. 이때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 여당이었는데도 내각 임명이 뜻대로 안 된 것을 봐도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초대 총리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는 모양새로 물러났으나, 후임자가 낙마해 다시 돌아와야 했다.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로 두 달 만에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에 진보 쪽 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런 썩어빠진 정권 출신자들이 정의의 대변인인 양 떠드는 가소로운 꼴을 보게 된다.

전두환 미화·찬양 이낙연은 총리 자격 없다

현직 전남도지사인 이낙연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우파와도 우호적으로 지내 왔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의원도 됐고, 이후에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지냈다. 민주당이 쪼개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리될 때 민주당에 남았지만, 노무현 국회 탄핵에는 반대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무기명 투표).

호남 배려와 중도 성향, 노무현과의 인연으로 총리 후보가 됐다. 하지만 부패 의혹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다. 그 기간에 대한노인회 간부에게 정치자금 받은 의혹도 풀린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을 미화·찬양하는 보도들을 한 것이다. 하나만 예로 들자. 1981년 2월 5일 한미정상회담 등 전두환의 해외 순방을 평가한 기

사에서 이렇게 썼다. “한미 관계의 정상 회복선언 자체가 큰 결실 … [우방] 국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왔던 굴절된 태도들은 이제 적어도 침묵되거나 아니면 선화하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굴절된 태도”는 전두환이 쿠데타와 광주항쟁 진압이라는 위험을 무릅썼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곧바로 한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강대국들의 위선이고, 금세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이런 제스처 동참을 “전통 우방의 대한(對韓) 태도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할 일인가?

또한 이런 “전비어천가”를 늘어놓았다. “전 대통령의 방미가 대외적으로 얻은 수확들이 국내에 투영했을 때 그 결과는 승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보면 전 대통령 방미의 결산은 대외 계정보다 오히려 대내 계정에 더 큰 수치를 올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생업이 즐거워졌다」는 일부 성급한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보면 이 같은 계산 방식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체제 동포의 모국 방문을 보장하겠다”, “나는 군사 정부에 명백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등 재미교포들 앞에서 전두환이 내뱉은 흰소리들도 미화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 재미 교민들이 모국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를 좁혀 「민족 대화합」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

주류 언론들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도 우파 언론과 친민주당 포퓰리즘 언론들이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실을 외면하는 듯하다. 오히려 일부 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를 찾아내어 따지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 이낙연의 이런 경력은 거대한 촛불 운동 뒤에 등장한 정부의 첫 총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인물을 호남 총리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5월 광주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김지윤

문재인 '개혁'의 관건은 그 지향과 알맹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문재인 의 책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궁금증과 기대가 일정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 정계 진출을 하면서 쓴 《운명》, 2012년 패배를 돌아보며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국정 구상을 담아 내놓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보면, 문재인이 일관되게 지켜 온 생각과 같수록 분명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일관되게 노무현 정부의 행적을 옹호하며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기도 했다”고 평가해 왔다.

또한 “진보진영[사회민주주의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임]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에 대해,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해, 나아가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운명》)고 주장한다. “국익”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도 한다. 가령, 문재인은 이라크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은 아니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 하며 오히려 당시 반전 운동을 나무라고,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안정을 가져왔다고도 변명한다.

그러나 이 지역 불안정을 유지시켜 온 미국의 패권 정책을 지지하면서 안정을 바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파병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됐으며,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파병과 전쟁 지원(5년 동안 7천2백38억 원)에 쓰였다. 노동자·민중에게 이익이 아닌 건 분명하다. 도대체 국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정책에 불만을 터뜨린 대중의 눈치를 살피느라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문재인은 정작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시장화 정책은 옹호한다.



문재인이 자부심을 갖자는 노무현 정부의 진실 노무현의 개혁 열망 배신은 광범한 환멸과 저항을 불러왔다.

그러나 노무현은 “기업하기 아주 좋도록, 활력 있게 기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대통령이 가진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하고는 실제로 법인세·소득세·사치품 특소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 정책을 폈고 비정규직 계약 법안을 통과시켰고, 철도 민영화 등을 전진시켰다. 노무현은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나눠 준다고 하면 큰 코 다친다”고 했고 문재인 자신도 법인세(명목세율) 인상은 한사코 미루고 있다.

문재인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하지 않는 길은, 정부가 해왔던 기능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운명》)이라고 한다. 문재인은 “민영화의 뜻을 모르는 걸까? 지금도 문재인은 박근혜식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문제라면서도 이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국무총리 지명자 이낙연은 규제프리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근본주의”를 꼽으면서 “원칙의 강함이나 단단함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1219 끝이 시작이다》) 그는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좋은 가치와 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더 폭넓은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며 “유연한 진보”가 우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폭넓은 진보”/“유연한 진보”는 중도 우파로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그가 거리낌 없이 끌어들이는 김광두는 박근혜의 경제 브레인이었는데, 이는 ‘적폐청산’은커녕 박근혜식 정책과 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진보가 아니면서 진보를 자처하는 것은 자신의 왼쪽에서 제기를 진정한 진보적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하나

민주당과 우파 정당들은 권력을 두고 다투지만 한국 자본주의를 위기에 서 구출하려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해 왔다. 노무현은 집권 1년 후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가 한 일을 국회가 대부분 수용해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 이라크 파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등이 이뤄졌다. 핵심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은 “경제성장 전략 없이 국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분배도 복지도 일자리도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는 “국가 운영”을 맡고서 민주당이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려 하지 않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려 할 것임을 예고한다. 경제 체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에게 그 고통을 떠넘기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오로지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만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들은 대부분 그런 ‘신임’을 얻었거나 아예 자본가 출신인 자들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자본가들의 눈밖에 난 인물들은 얼마 못가 퇴출됐다. 무엇보다 두 정권 모두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도 자본가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운영했다. 그런 만큼 “협치”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일에 우파의 힘까

지 모으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에게는 노동자와 피억압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윤 지상주의와 민주주의·평화·공공성 등은 양립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첫 해에만 노동자 2백4명이 구속됐다. 문재인이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슬쩍 넘어간 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만 보더라도 경찰 수천 명이 지역의 평화를 파괴했다.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화자찬에 역겨움마저 느낄 것이다. “국민에게 이런 주권자의 의식을 심어준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습니다. 그 씨앗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 국민이 권력이라는 주권자 의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은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힘 모으기’에 실패하면 어느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정부가 개혁 열망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요구다.

“진보·개혁진영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과 ‘복지 국가’를 정권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겠나.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가 남긴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노동자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조그마한 개혁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 마디만 종이가 가져올 긴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다. 인사 문제에서 벌써 그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수동적 태도를 조정하는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의 태도는 조만간 환멸을 느낄 노동자·민중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변화를 이루고 개혁을 성취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백은진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 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불이는 일(일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자기 팔과 다리의 근력뿐이다.

화물열차를 다루는 일은 아간 작업이 많아 교대제로 일하며 늦은 밤과 새벽에도 피로와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송원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자주 입는다. 심지어 열차 사이에 끼거나 열차에서 떨어지거나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돼 왔다.

조영량 동지의 동료들은 이번 일이 “예고된 사고”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끝없이 인력을 줄여 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에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조영량 동지가 일하던 곳의 정원은 7명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6명이 일하게 하다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에는 5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규정상으로는 달리는 열차에 뛰어 서 타고 내려지 못하게 돼 있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기 힘들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

게다가 최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정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지정휴일에 출근하면 이를 대체근무로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원을 충원하지는 않으니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사고 당일 오전에도 사측은 지정휴일을 이유로 이미 출근까지 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 결국 7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다가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예고된 사고”

수송원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10여 년 전만 해도 3만 명이 넘게 하던 일을 지금은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그 사이 신규 사업이 계속 확대돼 왔다.

문재인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로드맵’과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직이나 공공기업 자회사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기업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그럴 재원이 있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최대 사용자이기도 하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울 때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주의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 탄생 1백 년을 기리며

이 글을 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 안의 내용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다.

토니 클리프(사진)는 1백 년 전인 1917년 5월 20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46년 영국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기 2년 전이었다. 클리프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자로서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반대했다. 클리프는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 단체를 세우고 이끌었는데, 이 단체가 바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이다.

나는 SWP 중앙위원회에서 클리프와 20년 이상 함께 활동했다. 클리프는 지성, 결단력, 매력, 유머, 강인한 성품을 겸비한 개성 넘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클리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클리프는 거의 20년 전인 2000년 4월에 작고했는데 말이다. 그의 이론적 기여가 한 이유이다. 1940년대 후반 클리프는 소련 사회 분석을 선구적으로 발전시켰다. 클리프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이 사회주의나 (트로츠키가 말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종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소련의 지배 관료들은 서방의 사기업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 때문에 소련은 자본 축적 논리(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규명한 자본주의의 논리)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클리프는 이론적으로만 기여한 것이 아니었다. [클리프와 마찬가지로] 1917년에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한 또 다른 결혼한 유대인 마르크스주의자 에릭 홉스봄과 비교해 보라. 홉스봄은 위대한 역사가였지만 [스탈린주의] 공산당을 옹호했고, 신

노동당[노동당의 우경화]에 뒷문을 열어 주었으며, 여왕이 하사한 명예 훈장을 받았다.

반면 클리프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정치적으로 재확립했다. 스칼린주의의 독재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클리프는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적극 사용했다. 다시 말해, 냉전은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쟁투이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투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한 1991년에 SWP와 SWP의 국제 자매 조직들[남한 포함]은 성장할 수 있었다.

전략

무엇보다 클리프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혁명적 정치 조직 건설로 연결시키려 했다. 1970년대에 클리프는 네 권짜리 레닌 전기를 썼는데(국역: 《레닌 평전》 1~4권, 책갈피), 이 책은 혁명적 전략·전술의 보고다.

[클리프가 이 책을 쓴] 1970년대는 유럽과 북미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계급투쟁이 정점에 이른 때였다. 영국에서는 강력한 직장위원 운동이 일어나, 1970~74년에 집권한 히스 보수당 정부를 무너뜨렸다. 당시 클리프는 급진화한 학생·노동자들을 조직해 대중적 혁명 정당의 토대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했고, 이를 통해 향후 전투의 형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안타깝게도 히스 정부가 무너진 후,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고갈되지 않았고 [뒤이은] 노동당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마취제 구실을 했다.

현장조합원 조직들은 점점 관료적으로 변해 노동조합 관료 체계와 기업 구조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마거릿 대처가 1979년 5월 선거에서 승리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에 맞설] 노동자 운동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토니 클리프는 그런 경향에 착목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 덕에 SWP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대처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물론 대처 정부와 광원노조(NUM) 사이의 격렬한 전투에서 광원노조의 패배는 SWP에게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지만 말이다.

이후 클리프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스가 주장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니 블레어 정부 하에서 살았다. 클리프는 영국에서만 국제적으로든 정치적 기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를 붙잡으려고 애썼다. 또, 그는 새 세대에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유산을 전수하려고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내가 그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혁명적 끈기였다. 1990년 나는 그에게 “1980년대가 끝났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다. 클리프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1950년대를 살아 봤어야 하는데.” 대처 정부 시절보다 훨씬 혹독한 시기였던 냉전의 절정기에 클리프는 아주 작은 마르크스주의 단체를 건설했고, 이후 운동이 분출했을 때 그 단체는 더 큰 규모로 성장했다.

어느 모로 보나 오늘날의 정치 상황은 클리프가 살던 때와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클리프의 이론적 기여와 실천에서 배울 수 있다.

출처 영국 자본주의의 주간 신문 《쇼셜리스트 워커》 2555호 / 번역 김준호

추천 책



레닌 평전 1~4
토니 클리프 지음, 최필명·이수현 옮김, 책갈피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
토니 클리프 지음, 정성진 옮김, 책갈피

※ 더 많은 토니 클리프의 저서를 도서출판 책갈피 웹사이트(chaekalp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이정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사를 통한 고용의 가닥이 잡히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

다.

그러나 이마저도 못마땅한 경총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 기업을 사지로 내몰기라도 하는 양 아로 가닥이 잡히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

그러자 문재인은 경총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 발 해명을 내보냈다.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실무부를 총괄할 일자리수석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차관이자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 출신인 안연호를 내

정했다. 일자리수석을 보좌할 인사들도 기제부 관료들을 집중 배치했다. 양대 노총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가족들이 핵심직 노동 공약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이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날을 시사한다.

▶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럼에도 새 정부의 연사와 정부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 등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계에 어느 정도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최근 일자리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민주노총도 수일 내로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중앙집

행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일자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나머지는 노정교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의 연동해 참여를 결정하자는 조건부 참가 입장이라고 한다.

만약 민주노총이 힘이 매우 약한 처지라면, 이런 정부 위원회이라도 참여해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려 애쓰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상당수를 조직하고 있다. 투쟁 전통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급진좌파가 보기에 썩 만

족스럽지는 못해도 이력저력 저항했고, 특히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 국면에 국가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에 참여시키는 것을 노동 정책의 실패를 좌우할 요소로 강조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방증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 전풍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급진좌파가 보기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이력저력 저항했고, 특히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 국면에 국가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순 저항을 연기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 친사용자 성향이 강한 경제 관료들이 주도하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면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 오히려 노동자 운동이 강력한 힘을 보여 줘야, 일자리위원회의 논의 지형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길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6월 8일 총선 결과가 어찌 되느냐에 상관없이,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5월 26일 유세로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보수당이 맨체스터 참사를 악용하려 드는 가운데, 코빈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최상층 정치인으로서의 최초로, 미국의 중동 전쟁들에 영국이 협조한 것과 테러 공격들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당연히 보수당과 노동당 우파는 즉각 코빈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서도,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벌어진 9·11 공격이 이라크 침공에 선행한 일이라며 코빈을 비난한 논평이 가장 명창한 것이었다.

군인 출신의 보수적 역사가 앤드루 바세비치는 기념비적 연구서인 《미국의 대중동 전쟁》을 썼는데, 그 책은 197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며 시작된다. 그때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인 시절(1977~81년)이었다.

당시 카터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최근 죽었는데, [여객계도] 지금 미국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은 그가 위대하고 선한 인물이었다고 애도하고 있다.

브레진스키는 1998년에 한 인터뷰에서 제 자랑스러움을 늘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좌파적 군사 정부에 맞서 싸우던 이슬람주의 게릴라들을 CIA가 1979년부터 비밀리에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말이다. 브레진스키는 이를 통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맨체스터 비극은 서방 제국주의가 불러온 역풍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그랬듯) 진창에 빠지길 바랐고, 실제로 그리 됐다.

이슬람주의 테러에 불을 붙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브레진스키는 거만하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세계 역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탈레반인가 소련 제국의 몰락인가? 일부 무슬림들이 흥분해서 날뛰는 것인가, 중부 유럽이 해방되고 냉전이 끝나는 것인가?”

브레진스키가 이 인터뷰를 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흥분해서 날뛰는 무슬림” 중 일부가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렸다. 오사마 빈라덴이 알카에다를 결성한 것은 서방이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반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였다. 그 뒤 빈라덴이 서방을 적으로 여기게 된 계기는 미국이 중동

에서 최초로 직접 대규모 군사 행동을 벌인 것이다. 바로 1991년에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걸프전]이다.

2003년에 시작된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은 또 어떤가? 보수당의 지식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대니 핀켈스타인은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의 대외 정책이 국내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말한 것은 제러미 코빈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침공·점령

[2005년] 런던과 [2017년] 맨체스터의 폭발 참사들이 영국의 이라크 침공·점령 후에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둘을 원인과 결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복잡하게 쓴 것이다.

이런 궤변은 실제 벌어진 역사에 눈을 감는 것이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는 이라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아이시스 전신의 창립자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주변적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라크 점령으로 말미암은 혼돈과 고통 덕분에 기회를 잡은 알 자르카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알카에다를 이용해 점령 세력과 비(非)수니파 무슬림 집단을 모두 공격하는 종파적 이슬람주의 군사 조직을 건설했다.

미국이 알 자르카위를 살해하자, [미국의 침공 전까지 이라크를 지배한] 바트당 출신의 군 장교들과 점령군에 의해 투옥됐던 사람들이 모여 아이시스

를 만들었다.

서방의 지원 아래 이라크에서 시아파의 종파적 지배가 이어지고 리비아가 혼란으로 빠져들자 아이시스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드 전사들의 행동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시스는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반동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그런 세력들에게 거둬 경정자를 몰아주는 것은 바로 서방의 개입이다.

정치와 군사를 포함한 모든 전략에서,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이다. 이라크 침공이 더 많은 테러 공격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은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이라크 침공 전인] 2003년 2월 [영국의 정보기구인] 합동정보위원회도 그런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라크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면 알카에다의 위협은 커질 것이다. 알카에다는 중동에서 동맹군과 서방의 이익을 겨냥할 것이다. 충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중동이 아닌 지역,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서방의 이익을 겨냥해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 다른 이슬람주의 단체와 개인들에 의한 위협이 세계적으로 확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는 이런 경고를 강그리 무시했다. 그 뒤로도 서방 정부들은 계속해서 ‘개입과 참극’의 악순환을 이어 갔다. 영국은 2014년 10월 이후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1천3백 건이 넘는 공중 폭격을 벌였다. 이처럼 죽음과 파괴를 일삼는 악마 같은 행위에 코빈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몹시 지당한 일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56호 / 번역 김중환

노동당 코빈의 지지율 상승

평범한 영국인들이 급진적 메시지를 갈구하다

맨체스터 폭탄 공격 이후에도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5월 28일 발표된 영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노동당은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만회했다. 보수당 소속 총리 메이가 조기 총선을 선언할 당시 20퍼센트였던 격차가 6~14퍼센트로 크게 줄었다. 보수당은 사회복지 수급이 까다롭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이에 대한 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수당은 맨체스터 폭탄 공격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메이는 맨체스터 공격에 대한 우파의 반발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총선에서 이기면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코빈은 선거 유세에서 영국이 중동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공격이 벌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들춰냈다. 코빈의 연설 직후 실시된 여론조

사를 보면, 영국인의 절반 이상인 53퍼센트가 코빈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대외정책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응답은 24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코빈은 긴급 상황 대처에 투입되는 예산의 삭감을 멈추겠다고 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도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은 급진적 메시지에 대한 갈증이 컸음을 보여 준다.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코빈의 지지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에 투표 의욕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엔 코빈을 지지하려고 투표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이다.

한 투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열흘 동안 유권자 7백만~9백만 명이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수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

는 우파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그리고 보수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자본가들의 우려를 반영해 영국 파운드화는 한 달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주일 남짓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더 많은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데 코빈은 유세에서는 영국의 대외정책과 맨체스터 공격의 연관성을 지적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길 꺼렸다. 그리고 코빈과 노동당 예비내각의 내무장관 다이앤 애벗 등은 경찰이나 국가 정보 기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불필요한 타협적 연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과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은 보수당을 추격하는 데서 해로울 뿐이다.

실사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긴축에 맞서는 저항을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되려면 코빈이 계속 급진적이고 과거와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환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을 노동자 계급과 파업할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보아야

박설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최근에는 일부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는 하나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는 대체로 투표결과,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택’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 배제”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렸다’는 식의 우파적 비난과는 달랐다. 이 동지들은 진지하게 이번 사태를 평가하고 노동자 단결을 모색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논의를 부정확한 개념을 전제로 해선 안 된다. 즉, 정규직이 “적극적 배제”를 택했다는 관측은 잘못된 것이다.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면,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를 찍은 조합원은 61.7퍼센트였다. 하지만 김성락 집행부가 그토록 단호하게 밀어붙였음에도, 40퍼센트 가까이는 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찍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기아차 정규직의 다수가 집행부의 퇴행에 ‘적극’ 호응했다는 판단은 다소 피상적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김성락 집행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를 향해 벌인 퇴행(반동!)이었다. 이번 총투표는 노동자 단결을 해칠 목적이 명백했으므로, 절차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따지기 전에 내용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 따라서 총투표 자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총투표의 성격,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본지 206호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을 보시오.)

투표가 진행된다면 집행부 안이 가결될 것은 충분히 예상됐었다. 현장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수준이 근래에 충분치 않아, 노동조합 내 상하 세력관계에서 집행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성락 집행부의 거듭된 후퇴와 배신으로 최근에 사기가 좋지 않았다. 화성공장의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보이콧을 선동하고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 애썼던 것도 이 점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가해 반대표를 찍자던 전직 위원장단과 활동가들도 결코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신승철 전 위원장은 “현장 순회하면서 보니 활동가 조직들도 반대 선동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을 믿어 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방기의 자세였다.

물론 이런 평가는 지도부가 저러니 어쩔 수 없었다는 숙명론적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김성락 집행부라는) 노동조합 관료의 개량주의 문제였지만, 논의를 여기서 멈춰서는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교훈을 올바르게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2006년 기아차 원하청 공동 투쟁 당시 비정규직 연대에 헌신했던 ‘금속노동자의 힘’ 활동가들의 맹목적 집행권 추구가 이들에게 독이 됐다.

현장 조합원들은 때로 노동조합 지도부의 후퇴나 배신에 반발할 수 있다. 관건은 기층에서 노동조합 관료에 맞설 대안이 굳건하게 존재하는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의 문제다. 특히, 그동안 활동가들이 어떤 구실을 해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대의식은 어떻게 약화됐는가

이번 노조 분리 총투표의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보자. 이 문제에서도 원하청 연대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게 결코 아니다.

2015년 6월 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집행부의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벌였는데, 집행부가 주간연속2교대제와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후퇴한 것(신규채용 추구)이 문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백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 등 오랜만에 투쟁에 기지개를 폈고,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활동은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했다. 적잖은 활동가들이 노조 지도자들의 후퇴와 배신에 맞서 독립적인(자주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탓이다.

예컨대, 교섭장 봉쇄 투쟁의 주요 세력이었던 화성·소하리 공장의 ‘금속노동자의 힘’ 활동가들은 이듬해 집행부에 당선하면서 이제 반대편에 섰다. 집행부 자신이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고, 활동가들은 현실론을 들며 자기 집행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기아차 내 가장 규모가 큰 NL경향의 ‘민주현장’은 2015년 집행부 시절에 이미 신규채용 회의록을 작성한 당사자였다. 활동가들은 그 선을 넘지 못한 채, ‘김성락 집행부도, 분회의 정규직 전환 투쟁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을 폈다.

김성락 집행부가 추구해 온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반목을 키운 또 다른 쟁점이었다. 집행부는 당선하자마자 비정규직의

성과급 삭감을 요구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기를 포기하고, 도리어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을 위해 내놓자고 제안했다. 노동자 몫을 늘리기 위해 투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강요한 줄어든 파이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아웅다웅 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일부 정규직의 보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자 연대>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일찌감치 비판했듯이, 사회연대전략은 원하청 연대를 고무하기보다 거꾸로 연대의식을 갉아먹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활동가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예컨대, <한겨레>,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운동 활동가,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은 당시에는 김성락 집행부를 두고 “아름다운 연대”라고 추켜세우기 바빴다. 기아차의 대다수 활동가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의 성과급 삭감에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원하청 연대에 왜 해로운지를 설득하지도 못했다. 이 속에서 김성락 집행부가 일부의 보수성을 자극하며 파고들 틈이 생겼던 것이다.

화성 사내하청분회 김수익 집행부는 옹게도 신규채용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며 싸웠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하청 연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초기부터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투쟁에 역점을 두었다. 더욱이 이 투사들이 과거에 1사1노조에 반대했던 것을 조합원들이 모르지 않기(그리고 김성락 집행부도 그 점을 파고 들었기에), 과거의 잘못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층에서 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과정을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지도권을 잡고 그것을 떠받치

느라고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적 이해관계에 젖어들고 불필요한 타협을 거듭해 왔던 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려는 혁명가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단결을 위한 정치를 일관되게 내놓고 개량주의에 의해 쉽게 동요되지 않는 조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핵심을 비켜선 대안들

‘노동자는 하나인가’ 토론회에서 주발표자였던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힘은 “광범한 조직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정규직도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힘이 있어야 대등한 동료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근본적 이해관계를 달리하지 않는 이상 임금이나 조직력의 격차가 단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싸울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조직된 정규직의 연대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기아차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비정규직의 조직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지만, 정규직 활동가들이 발 벗고 연대해 투쟁이 성과를 내고 조직이 확대될 수 있었다. 현대차와 달리 노조가 통합돼 있던 덕분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노조로 조직돼 있었다.

김혜진 동지는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큰 규모의 공동행동, 비정규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만들고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조직력을 우회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국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노조가 있는 대기업·대공장의 조직력”을 활용해 투쟁을 발전시키고 조직화를 확대해야 더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 전체 규모의 커다란 투쟁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주요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대공장 정규직의 임단투를 백번 반복해도 연대적 계급의식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장의 담벼락에 갇히지 말고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등을 걸고 “정치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한다.

조직 노동자들은 자기의 힘을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재벌개혁 요구가 효과적인가 하는 점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이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투쟁을 터부시하거나 ‘요구’를 변경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다.

사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임단투를 잘 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회피해서 사기가 낮아지고 부문주의가 강화돼 왔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이 커져 온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갖고라도 후퇴하지 말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고무하면서, 동시에 그 힘을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이정원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다시금 한국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여러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나섰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공공기관에만 비정규직이 14만 4천2백여 명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품게 하는 동시에 노동자들 스스로 정규직화 목소리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예컨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철도노조 KN지부)은 코레일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고,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도 철도공사로의 복직과 열차승무 업무 외주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경총은 민간 기업들로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온갖 꾀변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더 완화하길 바라는 재계는 정부의 조치와 노동자들의 요구 확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 때문이라는 폐시키는 박근혜의 노동 개혁 정당화 논리 그대로다.

반쪽짜리

현재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하다.

우선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최근 한 언론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면서 "기간제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위원회가 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3만여 명 중 22만여 명이 제외됐다.(통계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원의 '세 정부의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보고서에서 인용)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19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 역시 최대치도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기간제 노동자 전체가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에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노동자들의 다수는 무기계약직인데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고용만 안정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직영화 추진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욕심'인가

정비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아직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한 차별에 시달린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임금테이블도 다르고, 직책도 승진체계도 없다.

역대 정부들은 공공부문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을 양산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간접고용 문제는 아예 '열외'로 취급해 왔다. 이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진전이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여 간접고용 문제의 실상과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한 덕분이다. 2013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이고 비슷한 시기 다산콜센터 노동자들도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정부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 상당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공공기관들도 자회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해 온 것 중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매우 미흡할 안이다.

최근 <서울신문>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65.7퍼센트는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기존] 정규직의 임금·복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는 답변은 9퍼센트에 그쳤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자. 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은 이렇게 개탄했다. "13년차 승무원 임금이 변함 없고

신규 입사한 직원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노조가 생긴 후에야 가능해졌다."

최근 다산콜센터가 재단으로 전환된 뒤, 노동자들은 여전히 성과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고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심명숙 다산콜센터 지부장은 재단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단지 "명찰만 바뀌었다"고 잘라 말했다.(<매일노동뉴스>)

해당 노동자들의 말처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고용 불안만이 아니다. 고용 불안 속에서도 상시 업무를 맡아 수년에서 십수 년까지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승진, 근속 인정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은 핵심적인 요구들이다.

심지어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폭발물처리 분야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처우가 후퇴했음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들은 최대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신규 채용 방식으로 근속도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30퍼센트가 넘게 삭감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자회사로의 고용은 문재인이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양질의 일자리'와는 모순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과도한 욕심인 양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가로막아 온 총인건비제와 비용 절감과 수익성을 강요해 온 경영평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자회사 방안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방안은 몹시 미흡하다. 이에서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중물 노릇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

다. 정부 정책의 이런 미흡함 때문에 노동운동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와 경계가 적지 않다.

사실 정부의 방안이란 것이 최근 민간 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내놓은 설치·수리 기사 자회사 고용 방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 사측은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근속도 인정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물론 이 안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투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동시에 사측은 최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다.

조만간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이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희망연대노조 지도부가 일찍부터 사측과 자회사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서도 이미 자회사 추진이 사실상 결정된 후에야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려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봉쇄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다.)

요즘 여러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와 사측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필요한 일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된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을 노조 조직화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옳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노동자 투쟁의 뒷받침을 받아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를 쟁취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20(목) - 7.23(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참가신청 및 문의
marxism.or.kr

